

전청조 설 직전 1심 선고...경호원·남현희와 진실공방

등록 2024.02.06 06:00:00 | 수정 2024.02.06 06:43:29



[서울=뉴스시스] 권창희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스시스]박선정 기자 =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전청조(28)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설 직전 나온다.

전씨는 첫 공판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27)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오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씨와 공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기일을 연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이씨가 자신이 재벌 행세를 하며 주변인들에게 정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씨는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범죄수익 일부를 관리했다는 점 등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피해금 21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2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고급 주택인 잠실 시그니엘을 임대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전씨의 요청에 따라 카드 대출까지 받아 약 4500만원을 투자했지만, 투자금과 밀린 월급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씨가 전씨에게 계좌 개설 명의 등을 빌려준 것은 신분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던 전씨의 말을 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공판 과정 내내 엇갈렸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공판에서 전씨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또 다른 경호원인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하는 과정에 이씨도 동참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A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전씨의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재판 결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이씨를 공범으로 시인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면서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무지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고 싶다.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전씨의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남현희(43)씨와 대질조사를 받기도 했다. 남씨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다만 남씨는 범행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3차 대질조사 이후 남씨 측은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남씨 변호인은 3차 대질조사 과정에서 전씨가 자신이 재벌 혼외자가 아니고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씨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적 없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별다른 반박 입장을 내지 않았다.

